

## 2023년 2분기 정책 동향

구분	법령	대표 발의자	발의 일자	주요 내용
1	채용절차법	김정호 의원 [더불어민주당]	'22. 12 .27.	구인자가 채용공고 게재시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금정보 제공을 의무화(미제공시 과태료 부과) - 제공 정보 : 채용 직종/직급 해당 임금 수준, 평균임금 및 임금의 상한액 또는 하한액 포함, 임금의 구성항목 / 계산방법 / 지급방법 등
2	직업안정법	윤건영 의원 [더불어민주당]	'23. 3. 14.	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/고시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- 고용기간 3개월 미만(100분의 30 이하), 고용기간 3개월 이상(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) * 단, 현재 기준 연봉 66백만원 이상의 전문/고급 인력은 상호간 협의한 금액을 기준함
3	직업안정법	이주환 의원 [국민의힘]	'23. 3. 23.	경미한 사항 위반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처벌 기준 완화(과태료)로 경감하여 플랫폼 폐쇄로 인한 구인/구직자 불편을 미연에 방지
4	직업안정법	정성호 의원 [더불어민주당]	'23. 3. 24.	구직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선급금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미등록 사업자 규제를 위해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
5	채용절차법	김용민 의원 [더불어민주당]	'23. 4. 3.	구인자가 채용공고 게재시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금정보와 근로시간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(미제공시 과태료 부과) - 임금정보 : 채용 직종/직급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그의 계산방법, 구성항목, 지급방법 - 근로시간 정보 :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,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사항
6	채용절차법	이탄희 의원 [더불어민주당]	'23. 4. 28.	구인자가 채용공고 게재시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금정보 제공을 의무화(미제공시 과태료 부과) - 제공 정보 : 채용 예상인원, 임금수준(상한액과 하한액을 포함), 소정근로시간, 임금수준 산정박식, 채용광고 기재방법 등
7	채용절차법	윤재옥 의원 [국민의힘]	'23. 5. 22.	채용절차법 전면 개정 - 법령 변경 :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/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 - 주요 신설 내용 : 부정채용 금지 및 처벌,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제재. 특정인 채용을 위한 사업 방해 행위 금지, 채용일정 변경시 고지,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